

6·13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다. 한반도 대변혁의 시기, 초대형 중앙발 이슈로 지방선거가 묻히는 사이, 문명의 날은 불과 보름 남짓, 360여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공약을 검증할, 이행가능성을 꼼꼼히 따질,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선거시계는 흘러만 가고 있다.

짧게는 4년 간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자치 일꾼을 뽑는, 선택의 날을 앞두고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 뉴스로는 지방 소동령(小統領)으로 불리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핵심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캠프별 해법을 긴급 진단했다.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이 주된 검증 포인트다.

검증 작업은 전문가 2명과 선거 담당 정치부 기자 4명이 각 캠프별로 답변서를 받아 서면 필터링과 검토 의견서 작성, 대면 토론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진성 조진태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동현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무등일보 양기생 정치부장, 선정태 정치부 차장,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배상현 부국장, 송창현 부장이 검증작업에 참여했다.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 후보, 전남지사는 민주당 김영록,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형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공천일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늦어진 바른미래당 전덕영 광주시장 후보와 박매호 전남지사 후보에 대한 검증은 생략했다. [편집자주]

# 공약 목표점 · 가치판단 기준 뚜렷...포퓰리즘적 공약도

## [6·13 공약 검증] 광주시장-후보별 공약

◇후보별 핵심 공약 들여다 봤더니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광주 만들기 6대 공약 ▲민주·인권·평화의 세계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4개 공약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9대 공약을 핵심 3대 분야로 나눠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도시 전체를 문화적으로 디자인해 문화가 일상이 되는 '컬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과거 정부에서 폄하했던 광주정신이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주의 역할을 집결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골자로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성평등 화장실 도입을 3대 공약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만 19세 광주 청년들에게 1회 500만원 지원, 광주시 노동국 신설과 노동재단 설립, 시 발주 공공기관 건축시 성평등 화장실 우선 도입 등을 서브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6년 기준 만19세 청년 2만 3086명을 기준으로 청년사회상속제 필요예산 1154억원, 노조 가입 20% 소요예산 연간 30억원 등 나름의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당 윤민호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방 자치 ▲청년의 내일이 아닌 오늘을 보장하는 청년 정책 ▲보편적 복지 확대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고 27개 세부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노조가입률 50% 달성, 공공 부문 민간위탁 폐지 및 정규직 제로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이동노동자 센터 확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을 포함한 청소년노동보호 조례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청년

의무 고용제 5% 실현, 어린이 병원비 무상의료, 지방의료원 확충 등을 공약화했다.

검증단 논의 결과,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의 공약 목표점과 가치판단의 기준에 차이점이 뚜렷했고 민주당 이 후보의 경우 백화점식 나열형 공약이나 지능단체 민원성 공약, '재탕 공약'이 많았고 진보 정당들은 지역 맞춤형 보다는 중앙 당 정책에 들어가가지 공약들이 적지 않았고 일부는 포퓰리즘적 공약도 노출됐다.

문화 분야와 청년 일자리, 보편적 복지 분야에서는 참신하거나 시의적절한 공약도 다수 제시됐으나 재원 조달 방안, 이행시기, 법률적 걸림돌, 정부 부처와의 충돌 등은 해결과제로 대두됐다.

우선 이용섭 후보의 경우 문화부 시장 신설 공약이 비록 '재탕 공약'이긴 하나 경제통인 자신이 시정을 총괄하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문화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물에게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팀워크 갖춘 러닝메이트 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다만, 논공행상식 위인실관으로 변질돼선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5·18을 포함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심층적으로 연구·기록·교육할 국립 연구기관 설립 안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5·18 진실규명이 국가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기념재단, 5·18 기록관, 광주시 5·18 진실규명단 등으로 분산되기 보다 이들을 적절하게 통합할 연구기관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이밖에 군공항 이전부지에 세계적 테마파크 조성, 지역 축제 통합, 일자리 예산 확대, 청년지원 확대 등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밀한 컨셉과 재원조달 방안, 이행 시기, '퍼주기 행정' 논란에 대한 반발 논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13지방선거를 16일 앞둔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선거 실천 다짐대회'가 열린 가운데 광주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섭(왼쪽부터)·정의당 나경채·민중당 윤민호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용섭, 문화부시장-5·18 국립연구 '긍정'...경자구역 '글썩요' 나경채, 예산 제시-노동국 신설 '호평'...청년지원 효과는 의문 윤민호, 복지정책 눈길...재원 조달-노조가입률 50%은 물음표

특히, 경자구역을 골자로 한 12조 뉴딜사업은 인천을 제외한 국내 대다수 경자구역들이 실패 또는 정체, 중복 투자, 중복 건설에 주민 재산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해제요구가 시달리는 점과 '소득주도 성장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이견, 1조원에 육박하는 광주시 부채 등이 악재로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전남 관광공사 설립의 경우 광주 인프라가 없는 광주로선 빨대 효과로 되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1175억원 규모 민주·인권기념파크에 대한 정부 부처의 부정적 기류, 재단 설립 납부, 기존 평생교육기관과 겹치는 시민대학 개설 공약 등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았다. "일자리 시장으로 표방하면서 일자리 정책을 첫번째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건 모순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나경채 후보의 경우 핵심공약별 예상 소요 사업비를 단계별로 제시한 점은 우선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청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국(局)'을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진보정당답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난의 대물림과 양극화로 인한 청년부채의 심각성을 부각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주형 청년사회상속제'와 같이 청년 정책에 초점을 둔 점은 호평 받았다.

그러나 부채와 1회 500만원이 사회상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소

불분명하고, 1회 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부채의 8분의 1을 겨우 감할 수 있는 정도여서 추가 부채까지 감안하면 자칫 상징적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됐다. 지방분권 개헌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예측가능성을 낮춘 요인으로 분석됐다.

성평등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핵심 3대 공약이 될 만한 시간인지의구심이 제기됐고, 성평등 화장실까지는 관광이나 궁극적으로 성중립 화장실로 확대될 경우 디지털 범죄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평가도 나왔다.

윤민호 후보의 경우 노동정책에 특화된 세부공약들이 다수 도출된 것은 차별화된 점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동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세한 공약 배려도 호평받았다.

그러나 노조가입률 50% 달성에 대해선 부정적 여론이 적잖았다. 대기업보다는 5인 미만 영세기업이 80%대에 이르고 전체 11만개 기업 중 300인 이상은 고작 0.00%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조 가입률을 급격히 끌어올리긴 쉽지 않고, 퇴레 노동권과 처우, 신분 보장 측면에서 예기찮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제시된 공약 대부분이 중앙단위 공약들이어서 지역에서 지체적으로 추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 월세 상한제나 청년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지급 공약은 엉뚱한 사람이 수혜자가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지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요 공약별 지역단위 예산규모와 이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뉴시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